

사회

영구임대아파트 '고독死' 사각지대

독거노인들 잇따라 숨진 채 발견 … 40일만에 발견되기도

광주 1만1752명 거주실태도 파악 못해

홀로 사는 김모(59·시각장애 6급)씨는 지난달 19일 광주시 북구의 한 영구임대아파트 자신의 안방에서 숨진 지 7일만에 발견됐다.

숨진 김씨의 친척이 연락이 달지 않자 119 구급대에 요청,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다. 이 친척은 발견 며칠 전부터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집안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 입회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다는 말만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같은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독거노인 박모(여·78·기초수급대상자) 할머니도 숨진 지 40일만에 발견됐다. 자녀·친척이 있었지만, 홀로 시름시를 않다 숨진 박 할머니의 집을 찾는 이는 거의 없었다는 게 주민

등의 얘기다.

광주지역 영구임대아파트가 독거노인들의 '고독사'(孤獨死)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병을 앓고 있는 홀몸 노인들이 숨져도 가족·이웃·사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다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북구 두암·각화·오치 주공아파트와 서구 쌍촌시영아파트 등 영구임대아파트 세대수는 1만470세대. 지난해 6월 30일 기준 광주지역 독거노인 수는 1만1752명이다. 이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 13만3274명의 8.82%에 이른다.

하지만, 독거노인 세대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주변의 도움이 절실한 영구임대아파트에 독거노인이 몇 세대

가 사는지 등 현황파악조차 돼 있지 않다.

특히 각 기초자치단체는 질병과 가난에 노출된 독거노인들의 고독사를 막고 질병치료를 돋기 위해 나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다.

북구 관계자는 "고독사를 막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틀어막아야 하지만 예산사업으로 부족한 점이 많아 안타깝다"면서 "우리는 월간 연락이 두절된 독거 노인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 직원·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입회 하에 문을 열고 들어가 조치 할 취할 있도록 해당 기관과 협조를 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고독사(孤獨死)=홀로 거주하는 노인과 청·장년층이 이웃과 가족의 무관심 속에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일.

광주시장 후보경선 여론조사

당원명부 유출 참관인 징역형

광주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정창호)는 13일 지난해 광주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임모(45)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임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4월 광주 지역 모 신문사가 실시해 불법 논란을 일으킨 ARS 여론조사와 관련, 조사기관에 당원명부를 유출하는 등 민주당 후보 경선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정신장애 춤추며 치료해요"

보내고 있다.

13일 광주시 서구 빛고을 체육관에서 한국정신의료협회 광주지회 주최로 열린 '정신장애 극복을 위한 한마음축제' 참가자들이 즐거운 시간을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적외선 특수카메라

딱걸린 사기도박단

순천경찰은 13일 적외선 특수카메라 등을 동원해 사기도박을 한 혐의로 황모(45)씨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이모(5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지난 1~8일 순천시 연향동 사무실 2곳에서 김모(53)씨 등 5명과 함께 속칭 '세븐포카' 도박을 해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황씨 등은 천장 형광등 주변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특수악품 처리된 일명 목카드를 비주면 외부 모니터에서 상대방 패를 읽어 무선 이어폰을 낀 동료에게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동생과 함께 도박장 관리 역할을 한 황씨의 친형 등 달아난 일당 3명을 추적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고드름 제거 중 숨진 소방관 순직 처리

행안부 심사위 결정

유족에 보상금·연금

지난 겨울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고드름 제거 작업 중 숨진 고(故) 이석훈 소방장이 순직 처리됐다.

13일 광주소방본부와 광산소방

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날

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열고 고

이 소방장에 대한 순직 처리를 결정했다.

이 소방장은 현행 소방법이 명시

한 소방관의 고유업무(화재진압,

구조, 구급 또는 관련 교육훈련)보다는 대민지원 활동 성격이 짙은 고드름 제거 작업을 하다가 숨져 순직 처리 여부가 불투명했다.

하지만 행안부 순직심사위는 고드름 제거 작업 역시 포괄적인 의미에서 구조 활동으로 간주, 순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방장이 순직한 것으로 결

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로도 인정

받을 수 있게 돼 가족들에게는 순

직 유족보상금 9000만원과 함께

매달 110만원의 유족 연금도 지급

될 예정이다.

광산소방서 관계자는 "광주를 포함한 전국의 소방관들이 이 소방장의 순직 처리를 간절히 기원했다"면서 "앞으로도 각종 민원 처리 현장에서 숨을 거둔 소방관들을 순직군으로 인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소방장은 동료 노은호(28) 소방사와 함께 지난 1월 광주시 광산구 한 아파트 12층에서 사다리차를 타고 고드름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주차해 숨졌으며, 노소방사는 재발치료중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황주홍 강진군수 불구속 수사

광주지검, 경찰에 지휘 … '영장청구엔 무리' 판단

광주지검은 13일 강진장학재단의 불법모금 논란과 관련, 황주홍 강진군수를 불구속 수사하도록 광주지방 경찰청에 지휘했다.

검찰은 지난 7일 7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경찰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관련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경찰 수사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황군수 개인비리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기록을 다시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황군수에게 기부금법위반,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증거 인멸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구속 의견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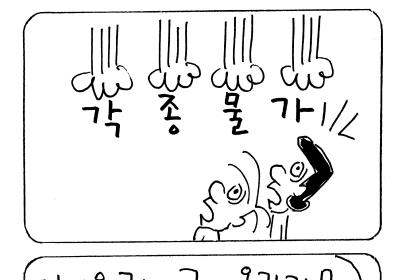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강진군청을

압수수색하고 황군수 등 11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소환조사했다.

이에 강진군은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일간지에 실는가 하면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했다며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대검찰청 등에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파장을 일으켰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내용참 (8292)
김충우



아파트 일가족 4명 사망

경찰, 시신 부검 의뢰

'광주 아파트 일가족 4명 사망 사건'('광주일보 4월 13일 6면')을 수사 중인 광주부경찰은 13일 북구 연제동 모 아파트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A(32)씨와 아내(35)·아들(4)·딸(2) 등 4명에 대한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손목에서 자해에 따른 주저흔이 발견된 점과 아내·두 자녀 등 3명의 목 부위에 난 상처와 A씨의 손목에 난 상처가 동일한 흉기에 의해 발생한 점 등을 미뤄 A씨가 자족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았다.

이학교 박모 교장은 "가해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 양

측에서 알아서 할 일이며 학교 측은 개입할 이유가 없다. 유군 부모에게 병원비를 약속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못 헤쳐 껌입은 연인들 걸음이 이상해

○…대형마트의 쟁쟁한 복구비 부당집행 조사

전남도·함평경찰

함평군이 폭설 복구비 가운데 일부를 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일부 농가에 지급했다는 광주일보 보도(4월 13일 6면)와 관련해 전남도와 경찰이 검토한 뒤 비위행위가 의심될 경우 정식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복구비 지원과 관련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몇 가지 있는 것 같다"며 "관련 의혹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13일 "함평군의 부당한 폭설 복구비 지원과 관련해 정확한 내용과 경위를 밝히기 위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총 3억9550만원에 이르는 폭설 복구비 전반에 대한 자료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함평경찰 역시 함평군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을 어기고, 공무원과 자영업을 하고 있는 농가에 복구비를 지

원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내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일단 함평군의 폭설 복구비 지원 현황 자료를 확보해 검토한 뒤 비위행위가 의심될 경우 정식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복구비 지원과 관련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몇 가지 있는 것 같다"며 "관련 의혹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도 이날 자체적으로 각 읍·면과 함께 잘못 지급된 복구비에 대한 회수에 나서고, 추가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함평경찰 역시 함평군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을 어기고, 공무원과 자영업을 하고 있는 농가에 복구비를 지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그동안 14만명 합격자 배출! 2011년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원치않는 대학 재수보단 편입으로 인생역전!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062)227-8088 개강 매월 1일 [kimyoung.co.kr]

